

정보통신부 조직개편의 내용과 의미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골자는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담당할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정책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이 지 환 매일경제신문 정보통신부 기자

위상 달라진 정보통신부

정부 부처 가운데 중요성과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는 조직으로 단연 정보통신부가 꼽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21세기 정보사회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지위 상승은 결코 의아한 일이 아니다.

지난 94년 12월 당시 체신부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공보처 등의 정보통신관련업무를 흡수, 새롭게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이제 예전처럼 그저 우편이나 전화를 관장하는 따분한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거의 떨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잘 나가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획기능과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겨냥한 정보통신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인사가 7월초부터 구체적으로 이뤄져 정보통신부는 이제 새 조직, 새 얼굴로 단장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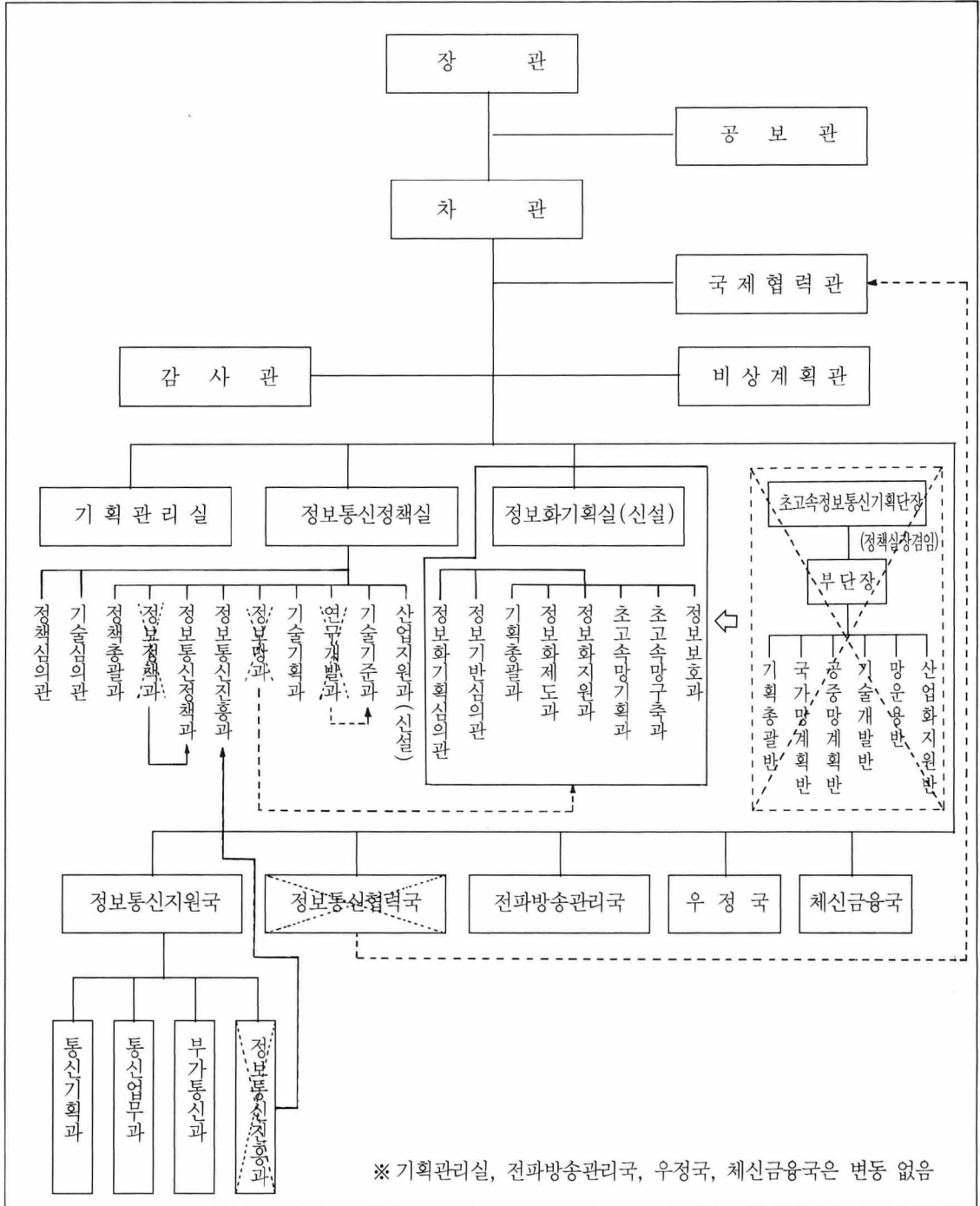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골자는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담당할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정책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단연 초점이 된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직된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을 정보통신부내 정규조직으로 끌어들이면서 보다 확대시킨 것이다.

1급인 정보화기획실장으로는 안병엽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이 발탁됐다. 실장 밑에는 정보화기획심의관 정보기반심의관 등 2명의 국장급 심의관과 6개과가 있다. 각 과별로 보면 △기획총괄과는 국가사회 정보화계획의 종합조정 △정보화제도과는 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보문화확산 △정보화지원과는 분야별 정보화사업 지원 △초고속망기획과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 △초고속망구축과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수립 △정보보호과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수립과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안정성 신뢰성 확보대책을 담당한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실의 경우 3개과가 새로 생

〈 표 〉 개편된 정보통신부 조직도



기고 3개과가 없어져 기존의 2심의관 6과 체제를 유지한다. 정보정책과는 정보통신정책과로 개편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과 중장기정책수립을 담당한다.

또 현재 정보통신지원국에 있는 정보통신진흥과가 정책실로 옮겨져 소프트웨어 관련산업 진흥 및 육성업무를 맡는다. 정보망과는 폐지되고 연구개발과는 기술기준과에 흡수되며 정보통신 기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원과가 신설됐다.

정보화의 핵심인 컴퓨터산업은 지금까지 하드웨어가 통상산업부쪽,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부로 분담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사실상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됐다. 정보통신정책실의 기술심의관 산하에 신설된 산업지원과가 바로 주무 부서이다.

올 상반기에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7개 분야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의 실무를 맡았던 정보통신지원국은 여전히 통신서비스업계를 관장한다. 우선 통신기획과가 업무영역 조정 및 구조개편, 통신사업자 허가 및 승인, 공정경쟁 및 요금정책 등을 담당한다. 통신업무과는 이용약관이나 요금 승인 등 기간통신사업자 진흥 및 육성, 부가통신과는 부가통신 및 이동통신사업과 번호자원관리 등을 맡게 된다. 정보통신지원국은 이번에 4개과에서 3개과로 축소된 대신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행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사업 발전 및 육성 관련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한편 지난 94년말 정보통신협력관이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차관 직속의 협력관 체제로 축소됐다. 국제협력관은 정보통신분야뿐 아니라 우정 및 체신금융 분야 대외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라인조직이었던 정보통신협력국은 스태프조직인 국제협력관으로 바꾼 데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구확대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정보통신부는 2실 5국 5관 28과 7담당관에서 3실 8관 30과 10담당관 체제로 바뀌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통신시장 환경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존의 초고속기획단은 외인부대로 구성된 파견조직 성격이 강해 구성원의 사기나 팀웍 등이 기대에 못미치고 업무추진과 의사결정 및 집행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획단'을 완전한 내부조직인 거대 '기획실'로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돼 각종 정보화시책을 국가차원에서 기획하고 정보화 관련사업을 종합 조정한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담당 조직이 과거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의 3과 구도에 이어 재정경제원 담당 조직이 과거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의 3과 구도에 이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의 신 3과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소설처럼 느껴졌던 정보고속도로시대가 어느덧 우리에게도 성큼성큼 닥친 이상 정보화를 국가정책의 큰 줄기에 맞춰 짜야 한다는 의식이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백악관 직속 국가정보기반(NII)전담기구로 중심으로 오는 2010년까지 전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각각 고도정보화사회추진본부와 국가정보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국 정부가 정보화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에 정보통신 전담비서관이 신설되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정보화추진확대회의가 분기마다 열리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국정에서도 정보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재정경제원 실력자들이 정보화기획실로 대거 자리르 옮김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보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보통신정책을 입안,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국가정책 조율에 적극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